

#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구교준\*\*

김희강\*\*\*

최영준\*\*\*\*

이희철\*\*\*\*\*

박일주\*\*\*\*\*

## 〈目 次〉

- |                 |                          |
|-----------------|--------------------------|
| I. 연구의 배경       | IV. 삶의 역량 영역별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
| II. 기회균등의 이론화   | V. 결 론                   |
| III. 기회균등의 분석방법 |                          |

## 〈요 약〉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회균등 개념 이론화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8개 영역(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패널 자료와 D-index를 활용하여 경제 영역과 타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한 실증적 기회균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 여부와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가와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여가 부족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회균등, 삶의 역량】

\* 이 연구는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koo@korea.ac.kr)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heekangkim@korea.ac.kr)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sspyjc@yonsei.ac.kr)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dlgclclfl@korea.ac.kr)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pij1@korea.ac.kr)

논문접수일(2016.3.24), 수정일(2016.6.8), 게재확정일(2016.6.20)

## I. 연구의 배경

불평등이 화두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Piketty(2014)의 최근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온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는 보편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Piketty에 의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 주요국에서 지난 100년 간 소득집중도가 심화되어 소득 상위 1%가 국가 전체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쟁기간 중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세습된 부에 의해 지배되는 신빅토리아식 계급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2년 통계청이 고소득층의 소득분포를 보정하여 발표한 신지니계수에 의하면 34개 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될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편이다(한겨레, 2013.11.19).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장 우려해야 할 문제의 핵심인지에 대해선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며, 그 이면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핵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는 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는 Rawls에서 찾을 수 있다. Rawls(1971)는 계약이론을 발전시켜 한 사회가 정의롭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은 언론, 사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Rawls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정의의 둘째 원칙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사회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지위와 직책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접근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Rawls의 논의는 정의의 입장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불평등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기회균등 문제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기회균등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행정학 분야에서는 기회균등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교육(김진영, 2011; 최영준, 2014), 고용(이만복, 2012; 이양수, 2015), 정치참여(손병권, 2015) 등의 기회균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기회균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기회균등이 무엇이고 어느 분야에서의 기회균등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다분히 편의적으로 기회균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결과 간의 비교가능성이 낮으며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다 후속연구도 제한적이어서 기회균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회균등 개념을 이론화하고 우리사회의 전반적 기회균등 문제를 실증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회균등의 이론적 의미를 Rawls의 정의에 관한 이론과 Sen의 삶의 역량 이론을 통해 밝히고 기회균등 문제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역을 도출한다. 기회균등 논의의 체계적 이론화를 위한 이러한 시도는 분야별로 파편화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기회균등 논의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기회균등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통해 도출된 8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노동패널 15차년도 자료와 D-index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시도한다.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의 실증적 평가를 위한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처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행정학의 임상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II. 기회균등의 이론화

### 1. 기회균등과 Sen의 삶의 역량(capability)

기회균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출발점은 Rawls의 정의론에서 찾을 수 있다. Rawls의 정의론이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기본적인 사회 가치로서 오랫동안 서구사회를 지배해 온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운영의 정의로운 가치로

서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Rawls 자신도 모든 분야에서의 평등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Rawls는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적인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도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awls, 1971). 이러한 Rawls의 입장은 Dworkin의 평등에 관한 연구에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고, 이후 평등 연구의 흐름도 모든 분야의 완전한 평등이 아닌 선택적 평등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Fleurbaey, 1995).

정의로서의 평등이 완전한 평등이 아닌 선택적 평등이라면, 그 다음의 논리적 질문은 과연 어느 분야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이다. 이것이 바로 1980년대에 유행한 ‘무엇의 평등?’ 논쟁의 배경이다. Dworkin, Arneson, Cohen, Sen 등이 이러한 논쟁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들은 무엇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Sen의 잘 알려진 스탠포드 대학 강연 “Equality of What?”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Sen, 1980).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후생경제학은 그 해답을 오랫동안 주관적 후생(subjective well-being), 즉 효용(utility)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효용 중심 접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Rawls는 특히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는 공리주의의 효용 중심 접근이 쾌락적 효용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쾌락적 효용은 재화의 소비를 통해 얻어지는 정상적 효용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수반하는 비정상적 효용(예를 들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며 열광하는 로마 시민들의 효용) 구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정의를 논의할 대상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개인이 가지는 선호체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얻기 위하여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고급 혹은 고가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해야 하는 비싼 선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효용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Cohen, 1993). 효용을 대상으로 평등을 논하는 것을 결과(output) 중심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비판을 이유로 Rawls와 Dworkin은 재화 혹은 자원, 즉 투입(input)을 대상으로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균등에 대한 기존 논의는 바로 이러한 투입, 다시 말해 출발선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접근으로 정리될 수 있다(Roemer, 1998). 첫째, 차별금지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이다. 이는 한 사회의 평가시스템이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직에서 승진대상자를 평가할 때 업무성과와 무관한 성별, 인종, 나이 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의 원칙(주로 성, 인종, 피부색, 성 정체성 등에 기초한 차별 금지 원칙)은 대개의 나라에서 법과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에 의해 필연적으로 영향 받고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 외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 받고 있는 이상,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외적 요소를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 '진정한(genuine)' 선택, 의지, 노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적 요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단지 외적 요소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즉 차별금지의 원칙을 넘어), 외적 요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fairly)'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때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program) 같이 특정 집단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차별금지 원칙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으로서의 기회균등이며, 이를 위해 보다 선제적인 정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 원칙(leveling the playing field principle)으로도 불릴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Jencks & Tach, 2006; Roemer, 1998). 기회균등에 대한 이러한 기존 연구는 기회균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회균등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나 어떤 분야의 기회균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에 보다 부합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적절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한편 Sen과 Nussbaum은 삶의 역량(capabi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회균등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삶의 역량 접근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개인이 얼마만큼의 효용을 느끼는지 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며, 여가를 즐기는 등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제도적 환경을 중시한다(구교준·김성배·윤종현, 2012).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삶의 기능(functionings)이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의하여 실현된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역량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삶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의 집합(opportunity set of achievable potential functionings)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투입의 구체적인 분야별 평등으로 해석된다(Robeyns, 2005).

즉, 삶의 기능은 삶의 역량이 성취된 상태로서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 삶의 역량은 기회로서 출발선을 뜻한다. 그러므로 역량 접근은 개인에게 일련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일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즉, 기회)(capabilities to function)을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에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Sen(1980)에 따르면 평등한 분배의 대상은 자원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개인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역량이다. 따라서 평등 혹은 불평등을 비교하고 측정하는 대상은 개인이 가진 자원이나 부의 양이 아니며,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역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개인이 가진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하며, 동시에 이는 실질적인 기회를 뜻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기회와 자유, 즉 역량이 바로 평등/불평등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Sen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량의 평등은 곧 기회균등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역량이론은 기회균등의 분석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량접근은 기존 기회균등에 대한 논의와 비교할 때 어느 분야에 대한 기회균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에 대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Nussbaum의 논의에 기초하여 어느 분야의 기회균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 2. 삶의 역량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기회균등의 영역

역량은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다원적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기회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것도 다양한 영역과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Nussbaum, 2011). Sen의 역량 접근을 이어 받은 Nussbaum(2011)은 국가가 보호하고 담보해야 할 인간이라면 갖춰야 하는 최소한 수준의 역량에 초점 맞추어 10개의 핵심 영역을 제시하였다. Nussbaum은 이 연구에서 이들 영역은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개별 영역이 모두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량은 다원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개별 영역 간의 연관성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Nussbaum은 이러한 10개의 핵심 역량을 어떤 문화와 정치 공동체도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 사회정의라고 정의하였다(Nussbaum, 2000). 본 연구는 Nussbaum의 역량 리스

트를 기회균등 평가의 영역을 구체화하는 기반으로 활용하여 <표 1>과 같은 8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10개 영역은 ①생명, ②신체건강, ③신체무결, ④감각, 상상, 사유, ⑤감정, ⑥실천이성, ⑦관계, ⑧다른 종, ⑨놀이, ⑩환경통제이며, 재구성한 8개 영역은 (a)건강, (b)안전, (c)교육, (d)관계, (e)환경, (f)여가, (g)경제, (h)정치이다. 이들 영역은 기본적으로 Nussbaum의 이론틀을 따르고 있으나 영역별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며, 본 절에서는 각 영역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Nussbaum의 논의와 함께 다른 학자들의 논의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한편 핵심 역량 영역 재구성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Nussbaum의 틀을 최대한 존중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g)경제와 (h)정치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라기보다 Nussbaum의 환경통제에 속한 물질적 통제와 정치참여를 두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Nussbaum의 생명과 신체건강은 (a)건강의 하나의 영역으로 묶었다. 놀이는 (f)여가로 표현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신체무결은 (b)안전의 영역으로, 감각·상상·사유, 감정, 실천이성의 세 영역은 포괄적으로 (c)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종은 동·식물과 관련되므로 (e)환경의 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 기회균등의 분석을 위해 재구성된 역량의 8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회균등 평가를 위한 삶의 역량의 영역 구성

Nussbaum 10개 영역		재구성한 8개 영역
① 생명(life)	→	(a) 건강
② 신체건강(bodily health)	→	
③ 신체무결(bodily integrity)	→	(b) 안전
④ 감각, 상상, 사유(sense, imagination, and thought)	→	
⑤ 감정(emotions)	→	(c) 교육
⑥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	
⑦ 관계(affiliation)	→	(d) 관계
⑧ 다른 종(other species)	→	(e) 환경
⑨ 놀이(play)	→	(f) 여가
	→	(g) 경제
⑩ 환경통제(environmental control)	→	(h) 정치

(a) 건강: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역량이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반적 수명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해당된다. 의료시스템의 미비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수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일찍 죽거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아 태아의 낙태율이 높다면 건강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영양을 취할 수 있는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이 건강 역량에 포함된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기초적인 역량임과 동시에 인간의 생애에 걸쳐 담보되어야 하는 건강 수준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건강 역량은 음식, 환경, 의료 수준도 함께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건강의 기회균등은 기회균등의 이론화에 크게 기여한 Roemer(1998)의 논의에서 교육, 경제와 함께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건강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논의는 영국의 *The Black Report: Inequalities in Health*(Black et al., 1980)를 계기로 1980년대부터 정책적 담론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사회적 계층과 사망률 간의 관계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 Bartley(2004)는 건강불평등의 행태적, 심리적, 물질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각국의 중요 의사결정이 국민의 건강 기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원국에 권고하는 “Health in all policies”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Leppo et al., 2013). 한편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기대수명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Gakidou et al., 2000; Marmot, 2005).

(b) 안전: Nussbaum의 언어로 신체무결(bodily integrity)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를 안전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했다. 주로 인간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성폭행,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의 자유로부터 시작해 보다 포괄적으로는 신체적·성적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및 사회구조와도 관련되는 역량이다. 안전의 불평등이나 기회균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소득에 따른 범죄의 분포에 대한 분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Demombynes and Ozler(2005)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득불평등이 범죄율의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무작위적인 분포가 아니라 소득과 연관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Fielding and Burningham(2005)는 홍수와 같은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에 노출된 인구의 구성이 사회적 계층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안전의 기회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암시하였다. 이 외에도 환경, 직업, 범죄와 관련된 위험이 소득이나 인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



다(Downey, 2006).

(c) 교육: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문자를 해독하고 기초 수학과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영역에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표현과 숙고,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의 능력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고 훈육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Nussbaum은 이를 교육이라 구체적으로 칭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영역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교육은 불평등과 기회균등의 이론적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영역의 불평등 연구가 대부분 실증분석 중심인데 비하여 교육 영역의 불평등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뿐 아니라 Roemer(1998), Okun(1975)을 비롯하여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논의는 대부분 양질의 교육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데, 이는 Nussbaum이 본 절에서 제시한 10가지 역량을 “fundamental human entitlement”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Okun의 철학은 클린턴 행정부의 핵심 가치인 “Putting People First”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교육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관한 실증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교육 지니계수를 활용해 교육 불평등의 측정을 시도한 연구(Thomas, 2001), 교육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Gregorio and Lee, 2003; Sylwester, 2002) 등이 있다.

(d) 관계: 관계는 개념화하기에 다소 모호한 영역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사회에 대해 정의감과 우애를 기를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다.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정의감과 관련되는 역량이다. 다른 하나는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중되고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이다. 타인, 사회, 공동체 속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과 관련되는 역량이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개인 수준의 관계 역량은 집단 수준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연결된다.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관계 혹은 관계가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사회적 관계나 자본의 질이 건강, 경제 분야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Wilkinson, 1996; Mohan and Mohan, 2002). 그러나 관계 역량이 건강과 경제와 같은 다른 분야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계 자체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논

의는 그리 많지 않다.

(e) 환경: 이 영역은 Nussbaum의 다른 종(other species)에 해당되는 영역을 재구성하였다. Nussbaum에게 다른 종이란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과의 공존을 의미하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는 환경이라고 칭했다. 개인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환경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 환경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인간의 역량을 평가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환경의 요소를 강조한 영역이다. 환경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물이나 대기와 같은 자연환경의 오염 분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Yang et al.(2013)은 개도국에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소득에 따라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Walker et al. (2005)과 Marshall(2008)은 산업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오염원에 노출된 주민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f) 여가: 즐겁게 놀고, 웃고, 기분 전환을 위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건강, 안전, 경제 등의 역량이 전제된다면 여가에 대한 역량이 보다 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여가 영역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여가의 양과 질의 분포가 교육이나 소득, 성별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Thrane, 2000; Aguiar and Hurst, 2008; Sevilla et al., 2012).

(g) 경제: 이 영역은 Nussbaum의 정치와 경제로 세분화된 환경 통제에서 경제 부분에 해당된다. 이 영역의 역량은 실질적인 기회로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지가 해당된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소유권을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양질의 직업을 구할 역량도 포함된다. 경제는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이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수많은 논의 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경제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다른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의 준거점으로 흔히 사용된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 소개한 경제 이외에 7개 역량 영역들의 불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 영역은 다른 영역의 기회균등을 평가하는데 기준 영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h) 정치: 이 영역은 Nussbaum의 환경 통제 영역 중 정치 부분에 해당된다. 인간이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이는 보다 포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소득이나 성별, 출신성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치 영역의 역량은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자유의 보장, 선거권과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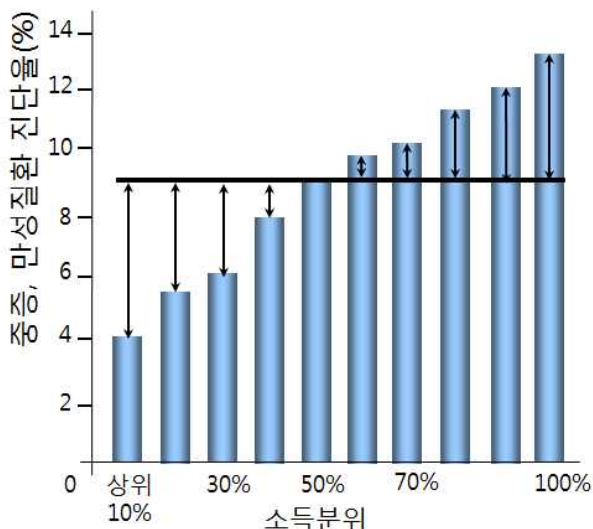
선거권의 보장과 더불어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정치 영역의 핵심이 소득이나 성별,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정치 영역은 소득, 성별, 인종, 계층 등에 따른 차별에 관한 Becker(1957), Sellers and Shelton(2003), Mummenday(1999) 등 기존 연구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Ⅲ. 기회균등의 분석방법

기회균등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이다. Rawls(1971)도 지적했듯이 불평등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분야의 기회 불평등이 다른 분야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기회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불평등이다. 따라서 기회균등을 논함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기회균등 연구는 바로 구조적 측면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8개 역량 중 다른 영역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기준 영역으로 경제 분야를 선정하고, 기준 영역의 불평등이 다른 역량 영역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을 진행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의 분석은 소득이 다른 영역에 끼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역들 간의 상관성을 소득을 통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분야별 기회균등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국가별 기회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D-index를 활용한다. D-index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득에 따른 접근성의 불평등 정도를 그룹별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dissimilarity measure의 일종이다(Barros, Ferreira, Molinas Vega, & Saavedra Chanduvi, 2009).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소득 분위별로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y), 즉 진단율을 계산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진단율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면 소득에 따른 건강 기회균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D-index의 개념



〈그림 1〉은 D-index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중앙의 수평선은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의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 중증·만성질환 진단율을 의미하고 열 개의 막대그래프는 가계소득 상위 10%에서 소득 하위 10%까지 각 그룹이 중증·만성질환 진단을 받을 예측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확률의 도출은 개인의 소득 이외에 나이, 성별, 부모학력 등의 개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래 식 (1)에서 전체 평균확률( $P_{\text{bar}}$ )과 그룹별 확률( $P_i$ )의 차이는 나이, 성별 등의 개인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가계소득에 따라 중증·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의 차이, 즉 건강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D-index의 도출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로는 평가 대상이 되는 역량 영역의 기회균등 정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 진단 여부와 같은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는 가계소득, 교육수준, 성별, 나이 등과 같은 환경변수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추정된 회귀식을 바탕으로 가계소득 계층별로 중증·만성질환 진단의 예측확률을 계산한다(이 때 가계소득 규모만 변화시키고 다른 변수들의 값은 그룹 전체의 평균값으로 통제한다.). 셋째, 계산된 그룹별 예측확률을 바탕으로 식 (1)을 통해 분야별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D-index를 계산한다(Barros et al., 2009).

$$D = \frac{1}{2P} \sum_i^n |P_i - \bar{P}| \quad (1)$$

만약 소득에 따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영향 받지 않는다면, 가계소득의 수준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진단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 분야의 D-index는 0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진단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진단율이 높아진다면, 소득에 따른 건강 기회의 불평등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큰 D-index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D-index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분야별 연관성을 고려한 기회균등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경제적 측면과 다른 분야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분야별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주지만 유사한 분석을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연관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기회균등의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고려했을 때 중증·만성질환 진단율을 추정할 수 있고 (10등급의 소득 구분과 3등급의 교육 구분을 가정하면 30개 그룹이 만들어지고 각 그룹의 중증·만성질환 진단율을 계산함), 이를 통해 소득과 교육의 연관성을 고려한 건강 기회균등 지수의 도출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8개 역량 영역에 대한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 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로 작성되는 자료이다. 현재 1차년도(1998년)부터 17차년도(2014년)까지의 데이터가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소득, 건강, 교육, 사회관계 등 Nussbaum의 역량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설문결과를 담고 있다. 교육 분야를 예로 들자면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은 무엇인지,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과 같이 질문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 아니라 상세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n개의 기회균등 영역이 개인수준에서 소득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부터 자료가 축적되어 불평등 구조의 변화와 같은 종단분석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 IV. 삶의 역량 영역별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 1. 분석모델 및 데이터

본 절에서는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8가지 역량 영역 중에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머지 7가지 영역의 기회균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즉 개인의 경제수준에 따라 교육이나 건강, 관계, 여가 등의 기회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앞에서 소개한 D-index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각 영역의 기회균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개인 소득(부)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정의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을 측정하는 가장 손쉽고 흔한 방법은 근로소득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있으므로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포괄적인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이와 같이 정의된 포괄적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패널 15차년도에 포함된 개인을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분야별 기회균등의 정도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종속변수를 아래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만을 표시해주는 0과 1의 명목변수로 구성되는데, 분석에는 SKY 대학 진학 여부, 범죄율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뿐 아니라 개인 건강이나 여가생활의 주관적 평가와 같은 주관적 설문자료도 함께 사용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로는 가계소득 이외에 성별, 나이, 교육수준, 부모학력, 건강정도 등을 영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절히 추가하였다. 8개 역량 영역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확률과 D-index를 도출하였다. 기회균등 영역별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선 건강 영역에서는 기존 실증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기대수명을 좀 더 구체화시켜 노동패널에 포함된 1)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2)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유무와 3)치료여부의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를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3대 중증질환은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질환이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또한 치료여부의 경우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지 않은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이들 질문은 노동패널 6차년도의 p060101, p066111, p06117~9 문항에 해당한다.

둘째, 교육 영역은 기존 역량 연구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교육 영역의 역량과 불평등에 대한 많은 기존 분석이 읽기나 쓰기와 같은 기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기초 교육역량이 매우 뛰어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교육 불평등 담론의 중심에 있는 SKY대학 진학과 영어구사능력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우선 SKY 대학 진학여부의 대상에는 가구주와 자녀를 모두 포함시켰고, 출신대학의 확인을 위해선 노동패널 1차-15차년도 p\*\*5241(“\*\*”는 노동패널 연차를 의미) 문항을 사용하였다.<sup>1)</sup> 또한 영어구사능력의 평가를 위해선 노동패널 10차년도 p104921 문항을 사용하였고, 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능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을 1로 코딩하였다.

셋째, 안전 영역은 기존 실증연구와 유사하게 경찰청에서 수집하고 동아일보에서 보도한(2013.8.23) 지역별 3대 강력범죄발생 건수를 지표로 사용하였고, 1인당 강력범죄발생률 상위 10%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사건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넷째, 관계 영역은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노동패널 15차년도 p156506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만족”과 “만족”으로 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다섯째, 환경 영역은 다양한 기존 연구에서 물과 대기의 오염 정도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한국도시통계(2009-2012)에서 발췌한 1인당 폐수발생량을 지표로 사용하였고, 1인당 폐수발생량 상위 10%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사건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여섯째, 여가 영역에서는 기존 연구에 여가시간의 양과 질에 대한 논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가시간의 주관적 만족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15차년도 노동패널의 생활만족도 중 여가만족도에 관한 p156502 문항을 활용하여, “매우만족”과 “만족”으로 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 영역의 경우 영역의 핵심 개념이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 점을 고려하여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여부를 프록시지표로

1)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를 요한다. 노동패널은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한 세대가 바뀌어 대학 진학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담기엔 아직 부족하다. 그 결과 SKY 대학 진학여부를 세대주의 자녀들만으로 국한할 경우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해당 사례의 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주는 세대 간 부의 이전 경향에 따라 역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출신일 개연성이 크다는 가정 하에 가구주와 자녀를 함께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활용하였다. 경제적 차별이 있는 경우 정치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패널의 차별 관련 문항(P076301)은 7차년도에 1회 조사되었으며,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 성별, 학력, 연령, 장애여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는지 광범위하게 묻고 있다.

〈표 2〉 기회균등 영역별 종속변수

구분	종속변수	세부내용
건강	현재 건강상태	1 :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0 :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중증질환+ 만성질환 유무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및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진단경험 1 : 있지만 완치되었다, 있어서 치료중이다,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0 : 없다
	질환 치료여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및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진단경험 1 :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0 : 있지만 완치되었다, 있어서 치료중이다
교육	SKY대학 진학	1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0 : 기타 학력
	영어 구사능력	1 : 외국인과의 업무상 논의가 가능하다,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다 0 : 거의 할 수 없다,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일상회화정도는 가능하다
안전	10만 명당 강력범죄건수 상위10%	지역별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건수 1 :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상위 10% 지역 0 : 기타 모든 지역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생활만족도-사회적 친분관계 1 : 매우만족, 만족 0 :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환경	1인당 폐수발생량 상위10%	1일 1인당 폐수발생량 1 : 전국 상위 10% 지역 0 : 기타 모든 지역
여가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여가활동 1 : 매우만족, 만족 0 :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정치	차별경험 유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 1 : 차별을 겪고(은 적이) 있다 0 : 없다



## 2. 영역별 분석결과

### 1) 건강

건강분야는 소득에 따라 기회균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보장률이 2013년 기준 62%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은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건강의 기회균등 정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건강분야에 활용된 종속변수는 1)현재의 건강상태, 2)3대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유무, 3)3대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여부의 세 가지이다. 따라서 건강분야의 기회균등은 소득 분위에 따른 1)현재 건강하다는 응답여부, 2)3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유무, 3)질환 치료여부의 예측확률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아래 <표 3>은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에서 종속변수의 예측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우선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다’ 혹은 ‘건강한 편이다’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예측확률을 살펴보면 소득 10분위(상위 10%)에서는 64.6%에 달하는데 소득 1분위(하위 10%)에서는 38.5%에 그치고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의 차이가 1.7배에 달한다. 전체 응답자의 긍정평가 평균 비율인 52.3%와의 차이를 고려한 D-index는 0.69로 나타났다.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유무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소득 10분위에서 이들 질환을 가지고 있을 예측확률은 5.3%인데 반하여 소득 1분위에서는 8.4%로 두 그룹 간에는 1.6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치료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예측확률은 소득 10분위가 13.3%, 1분위가 17.2%로 앞의 두 변수와 비교할 때 소득 그룹 간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D-index의 경우에도 0.36으로 앞의 두 경우보다 적게 나타났다. 즉 중증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 여부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3〉 건강 영역의 기회균등

건강	1) 현재건강상태		2) 중증+만성질환		3) 질환 치료여부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6456	0.1068	0.0527	0.0910	0.1330	0.0736
1분위	0.3850	0.1382	0.0839	0.1518	0.1723	0.0527
평균	0.5321		0.0644		0.1559	
D-index		0.6882		0.6808		0.3641

2) 교육

교육은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것이다.<sup>2)</sup> 2014년 기준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16.6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통계청, 2015), 실질적 의미의 교육 기회균등을 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분석은 소득이 변함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SKY로 불리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과 영어구사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줌으로 해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득에 연관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우선 명문대학 진학률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명문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분위별 진학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 소득 10분위의 경우 예측확률이 1.25%로 나타난 반면 소득 최하위인 1분위에서는 예측확률이 0.26%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무려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index도 기회균등을 평가하는 7개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2.23으로 계산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명문대 진학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 현상이 교육 분야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를 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구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할 예측확률은 소득 10분위의 경우 1.77%인데 반하여

2) Nussbaum의 교육 역량은 글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사유 능력을 의미하지만 대학진학율이 80%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기회균등을 평가하는데 교육 역량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문대 진학과 같은 엘리트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역량을 정의한다.

소득 1분위는 0.32%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SKY대학 진학의 경우와 비슷한 5.5배에 달했다. 또한 그 결과 D-index도 7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2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의 교육 기회 불평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사회의 교육기회 불평등의 중심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최상위권 대학과 사교육 시장의 주원인인 영어교육이 위치하고 있음이 분석 결과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은 칠레,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칠레와 함께 세계 주요국들 중 최저 수준임을 고려할 때(OECD, 2014a), 소득수준은 엘리트 대학교육 기회의 뚜렷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교육 영역의 기회균등

소득분위	1) SKY 대학 진학		2) 영어 구사능력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0125	0.5465	0.0177	0.5097
1분위	0.0026	0.2865	0.0032	0.3157
평균	0.0060		0.0088	
D-index		2.2256		2.2431

### 3) 안전

세월호 사고와 같은 최근의 대형 안전사고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득격차에 따른 주거안전이나 환경안전의 차이의(예를 들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범죄율이 더 높다던가 저소득층일수록 발전소와 같은 환경오염 시설 근처에 거주할 확률이 더 높은 문제 등) 문제가 뚜렷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안전의 불평등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안전 분야의 기회균등은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의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에(기초자치단체 기준) 거주할 예측확률을 소득 분위별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범죄율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이 9.1% 정도로 나타났으나, 소득 1분위에서는 12.9%로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가 낮아짐에 따라(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앞의 건강이나 특히 교육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다. 최상위 소득집단과 최하위 소득집단 간의 예측확률 차이는 약 40% 남짓인데, 이는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D-index도 건강이나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0.50으로 계산되었고, 안전한 지역에 거주할 기회에 관한 한 소득에 따른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5〉 안전 영역의 기회균등

소득분위	범죄건수 상위10%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0907	0.0732
1분위	0.1292	0.1083
평균	0.1062	
D-index		0.5049

#### 4) 관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관계의 양과 질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OECD에서 발간한 2014년 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quality of support network”은 77점으로 조사 대상인 34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OECD, 2014b).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생기므로 관계의 양과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관계 분야의 기회균등 평가를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노동패널의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매우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답할 예측확률을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소득 10분위 응답자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64.4%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사회적 친분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소득 1분위 응답자가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34.5%로 낮아졌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에서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의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예측확률을 기준으로 도출한 D-index값도 0.81로 교육 분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분야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Better Life Index의 “quality of support network”에 대한 조사와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6〉 관계 영역의 기회균등

소득분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6346	0.1270
1분위	0.3445	0.1596
평균	0.5061	
D-index		0.8072

## 5) 환경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같은 좋은 환경에 둘러 싸여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좋은 환경을 접하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발전소 인근지역처럼 공해 발생 가능성으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므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에 따라 향유하는 환경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환경 분야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도시통계 자료 중 주민 1인당 폐수배출량이 상위 10%인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폐수배출량으로 대리 측정하였고, 상대적으로 오염된 환경을 가진 지역에 거주하게 될 예측확률이 소득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7〉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위 10%의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게 될 예측확률을 보여준다. 소득 10분위의 개인이 오염도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은 10%인데 소득 1분위의 개인이 오염도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은 8.8%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예상과는 반대로 오염도 상위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이 고소득층의 경우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이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를 1인당 폐수배출량이 아닌 공기오염정도를 가지고 측정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에 따른 예측확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차이에 따라 거주환경의 오염도가 크게 달라지는 환경의 기회불균등 문제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환경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기의 질이나 수질을 중심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환경의 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OECD Environmental Statistics(2011)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환경의 질은 OEC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7〉 환경 영역의 기회균등

소득분위	1인당 폐수배출량 상위10%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1000	0.0292
1분위	0.0879	0.0349
평균	0.0945	
D-index		0.1782

### 6) 여가

여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얼마나 양질의 여가시간을 가지는지를 들고 있다. 실제로 행복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휴가기간을 보내고 있다(OECD, 2014b).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여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패널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을 소득에 따라 계산하

여 여가에 대한 기회균등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소득 10분위 그룹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은 42%에 달하는데 반하여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소득 1분위 그룹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은 15.9%에 머물렀다. 두 그룹 간의 예측확률 차이는 2.6배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D-index도 1.28로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7개 기회균등 평가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여가 기회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고용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5%에 달하고 이들의 시간 당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5.8% 수준이다(통계청, 2014). 저임금 고용불안정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2~3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여가활동 만족도 격차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다.

〈표 8〉 여가 영역의 기회균등

소득분위	여가 만족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4199	0.2348
1분위	0.1589	0.2220
평균	0.2857	
D-index		1.2789

## 7) 정치

정치 분야는 기회균등의 여러 가지 영역 중 아마도 가장 생소한 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차별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정치의 기회균등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록시로 노동패널자료에서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차별 여부를 묻는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예측확률을 구해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을 평가하였다.

〈표 9〉는 소득 분위에 따른 차별 경험의 예측확률을 보여준다. 최상위 소득 10분위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할 예측확률이 12.3%인데 비하여, 최하위 소득 1분위의 경우엔 그 비율이 25.1%로 상승한다.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 간의 차별 경험 가능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 결과 D-index도 1.09로 교육, 관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2014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차별 요인은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의 51.4%).

〈표 9〉 정치 영역의 기회균등

소득분위	차별경험 유무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1227	0.1323
1분위	0.2514	0.2536
평균	0.1668	
D-index		1.0962

## V.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첫째는 기회균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기회균등 문제를 소득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Sen이 잘 알려진 자신의 에세이 “Equality of what?”에서도 강조하듯이 소득과 같은 수단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기회균등의 논의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역량과 같이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Sen과 Nussbaum의 역량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역량이 기회균등 개념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플랫폼으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의 8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역량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영역별 기회균등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소득이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준 영역임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소득을 통해 영역 간 상관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접근은 분야별 기회균등의 정도뿐 아니라 경제 부문의 역량과 다른 부문의 기회균등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 해서 기회균등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경제 분야를 제외한 7개 영역 중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SKY 대학으로 대표되는 명문대 진학 확률은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에 거의 5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영어구사 능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Y 대학 진학여부나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사회의 교육 기회균등 정도는 다른 분야들과 비교할 때 훨씬 열악한 수준인데, 이는 다른 분야의 기회불평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교육은 바로 그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기회불평등은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여러 역량 분야의 기회불평등으로 이어져 우리사회 전반의 불평등 현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이외에도 여가와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라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구조적 분석의 측면에서 향후 특정 기회불균등 문제의 세부 구조 파악을 위한 연구나 종단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의 경우 소득에 따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소득으로 인해 발생된 유무형의 이득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여가 역량 제고로 이어지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 유형(소득 혹은 자산)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분야별 역량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도 기회불균등의 고착화, 세습화 문제를 해소할 행정·정책적 기제를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도시근로자 중심의 노동패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남긴다. 노동패널은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포괄할 수 있으며 종단적 연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긴 하나 농촌인구, 장애인, 외국인 체류자 등 향후 우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기회균등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실증적 주목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교준·김성배·윤종현. (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173-192.
- 김진영. (2011).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평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13(2), 191-239.
- 서울시. (201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손병권. (2015).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미래정치연구」, 5(1): 57-73.
- 이만복. (2012). 장애인 고용의 기회균등과 유지에 관한 연구: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1: 153-180.
- 이양수. (2015). 기회균등과 실력주의 사회. 「시민인문학」, 28: 151-190.
- 최영준. (2014).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인문연구」, 71: 165-202.
-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5). 2014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사교육비 분석 보도자료.
- 행정자치부. (2012). 한국도시통계.
- 한겨레. (2013.11.19) '새 지니계수로 분석해보니 한국, OECD 34개국 중 6위...불평등 심각.'
- 동아일보. (2013.8.23.) '전국 3대 강력범죄 지도.'

- Aguiar, M. & Hurst, E. (2008). The increase in leisur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 13837*.
- Barros, R. P., Ferreira, F., Molinas Vega, J., & Saavedra Chanduvi, J. (2009). *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ashington, D.C.: World Bank.
- Bartley, M. (2004). *Health Inequality: An Introduction to Theories, Concepts and Methods*. Cambridge, UK: Blackwell.
- Becker, G. (1957).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ck, D., Morris, J. N., Smith, C., & Townsend, P. (1980). *The Black Report: Inequalities in Health*. Dep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UK.
- Cohen, G. A. (1993). Equality of what? On welfare, goods, and capabilities. In M. C. Nussbaum

- &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mombynes, G. & Ozler, B. (2005). Crime and local inequality in South Afric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6: 265-292.
- Downey, L. (2006). Environmental racial inequality in Detroit. *Social Forces*, 85: 771-196.
- Fielding, J. & Burningham, K. (2005). Environmental inequality and flood hazard. *Local Environment*, 10: 379-395.
- Fleurbaey, M. (1995). Equal opportunity or equal social outcome? *Economics and Philosophy*, 11, 25-55.
- Gakidou, E., Murray, C.J.L., & Frenk, J. (2000). Defining and measuring health inequality: An approach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health expectancy.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Vol. 78 No. 1
- Gregorio, J. & Lee, J. (2003). Education and income inequality: New evidence from cross-country data.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 395-416.
- Jencks, C. & Tach, L. (2006). Would equal opportunity mean more mobility? In G. Fields, S. Morgan & D. Grusky (Eds.), *Mobility and Inequality: Frontiers of Research in Sociology and Economic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ppo, K., Ollila, E., Pena, S., Wismar, M., & Cook, S. (Eds.). (2013). *Health in All Policies*. Helsinki: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 Marmot, M. (2005).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equalities. *Public Health*, 365: 1099-1104.
- Marshall, J. (2008). Environmental inequality: Air pollution exposures in California's south coast air basin. *Atmospheric Environment*, 42: 5499-5503.
- Mohan, G. & Mohan, J. (2002). Placing social capit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 191-210.
- Mummenday, A. (1999). Social discrimination and tolerance in intergroup relations: Reactions to intergroup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158-174.
- Nussbaum, M.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Nussbaum, M.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1). Environmental Statistics.
- OECD. (2014a). Education at a Glance.
- OECD. (2014b). Better Life Index.
- Okun, A.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 93-114.
- Roemer, J. (1998). *Equal Opportu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llers, R. & Shelton, N. (2003). The role of racial identity in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079-1092.
- Sen, A.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f Human Values* (pp. 257-280). Salt Lake City: Univ of Utah Press.
- Sevilla, A., Gimenez-Nadal, J., & Gershuny, J. (2012). Leisur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65-2003. *Demography*, 49: 939-964.
- Sylwester, K. (2002). Can education expenditure reduce income inequali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1: 43-52.
- Thomas, V., Wang, Y., & Fan, X. (2001). Measuring education inequality: Gini coefficient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52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Thrane, C. (2000). Men, women, and leisure time: Scandinavian evidence of gender inequality. *Leisure Sciences*, 22: 109-122.
- Walker, G., Mitchell, G., Fairburn, J., & Smith, G. (2005). Industrial pollution and social deprivation: evidence and complexity in evaluating and responding to environmental inequality. *Local Environment*, 10: 361-377.
- Wilkinson, R. (1996). *Unhealthy Societies*. London: Loutledge.
- Yang, H., Bain, R. Bartram, J. Gundry, S. Pedley, S. & Wright, J. (2013). Water safety and inequality in access to drinking-water between rich and poor household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47: 1222-1230.

## ABSTRACT

### Are We Living in an Equal Opportunity Society?

Jun Koo, Young-Jun Choi, Hee-Kang Kim, Heechul Lee & Iljoo Park

Equal opportunity for wealth and power is one of the gravest issues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posits eight critical areas of equal opportunity (health, safety, education, relations, environment, leisure, politics, and the economy) drawing upon Sen's capability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he economy and the other seven areas of equal opportunity utiliz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inco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equalities in the other areas. In particular, education seems to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deepening structural inequality in Korea.

【Keywords: equal opportunity, capability】